



배포 일시	2022. 11. 22.(화)			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익진 (044-201-4504)
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오한영 (044-201-4506)
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주거복지지원과	담당자	사무관	최영록 (044-201-4533)
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소영 (044-201-4539)
	공공주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송우영 (044-201-4514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정부는 서민·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

### < 보도 내용 (JTBC 11.21) >

◆ '주거사다리' 약속 지켜졌나

- 공공임대주택 연 10만호 공급 공약에도 예산 5.6조원 삭감
- 주거급여도 임기 내 중위소득 50%까지 지급 공약했으나, 내년 47%에 그침

□ 윤석열 정부는 청년·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\*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'공공임대 중심'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'공공임대 + 공공분양'으로 주거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- 공공임대주택은 서민·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·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소득·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\*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·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\* 선택형(6년 거주 후 분양 자율 선택), 나눔형(시세 70% 분양 후 차익 70% 보장), 일반형 등

-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상향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7%로 확대\*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,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중인 '27년까지 중위소득 50%까지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\* (대상) 기준중위소득 46 → 47%(132만→146만가구), (예산총액) 2.18조원 → 2.57조원
- 또한, 반지하, 쪽방,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정상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('22년 7천호 → '23년 1만호)와 함께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지원을 신설(5천호)하고,
- 이주비 및 생필품비 등 이주생활비용(가구당 40만원)도 정규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오한영 서기관(☎ 044-201-45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